

<① 신과학기술행정체제, 어떻게 바뀌나>

교육과학기술부로 기존 과기부 기능 90% 이관

글 | 박방주 _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bpark@joongang.co.kr

옛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를 합친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닳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 두 달 새 벼락치기로 정부 조직을 확 바꾸는 바람에 시행도 하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과학계에 과학기술부 폐지를 둘러싼 반대성명이 난무하고, 전직 장관들이 인수위와 정치권을 뛰어다니며 막아보려고 애썼으나 무위에 그쳤다. 과학계는 이제 싫든 좋든 새로 바뀐 과학기술행정체제에 적응해야 한다. 과학기술부가 단순히 없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체제가 대폭 달라졌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기부 혁신본부 기능 대체

청와대부터 보자. 기존 정보과기보좌관이 없어지고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신설됐다. 현재 이주호 수석이 맡고 있다. 그 밑에 과학비서관이 있으며,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국회의원 출신의 이주호 수석과 대학 교수 출신의 김창경 비서관 라인이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보좌하지만 기존 정보과기보좌관처럼 밀도 있는 관심이 가능할지 지켜볼 일이다. 과기행정체제나 산하 단체의 통폐합, 정책 개발 등의 밑그림을 청와대에서 벌써부터 그리고, 챙기고 있어 이-김 라인의 작동은 음으로 양으로 한국 과학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창경 비서관은 또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함께 재료 공학 분야에서 서로 많은 교류를 해온 사이다. 이 때문에 그나마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옛 과기부 혁신본부가 없어짐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즉, R&D재원을 배분하는 실제적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위가 먼저 국가 R&D 투자전략에 따라 예산 배분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R&D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국가위 운영체제도 5개 전문위원회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국가위(위원장 대통령)-운영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문화수석)-주력기간산업기술위원회, 거대기술위원회, 국가주도기술위원회, 첨단융복합기술위원회, 사회기반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 10팀에 정원 8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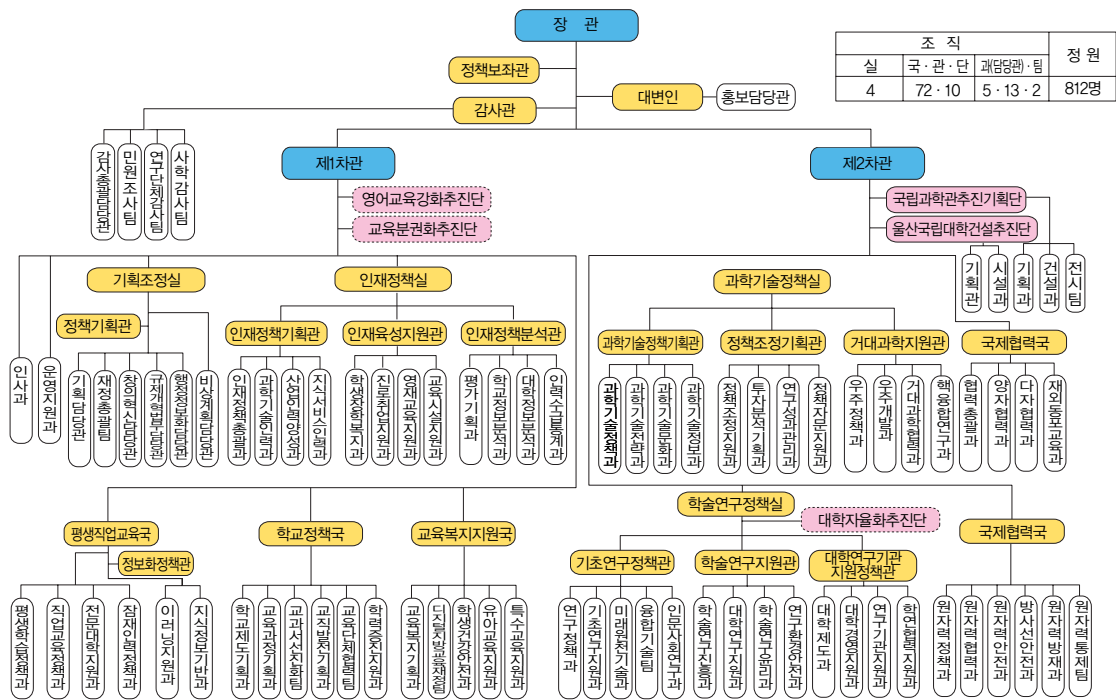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존 과학기술부의 기능 90% 정도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 아래 두 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 10팀으로 812명의 정원으로 편제가 확정됐다. 3월 중순까지도 후속 인사를 하는 등 조직 개편 초기의 진통을 겪고 있다.

조직 개편 뒤 당초 인사 방침은 과학기술부에 있던 사람은 과학기술쪽에,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쪽에 배속하기로 했으나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한다는 바람에 뒤섞여 발령이 났다. 또 당초에는 1차관은 교육을, 2차관은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 모습을 드러낸 조직도에는 2차관이 대학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과학계에서는 2차관에게 교육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대학 부문을 떠맡긴 것은 과학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게 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나돌았다(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 참조).

'화학적 결합' 따른 인사에 '음모론'까지 대두

2차관이 맡은 대학자율화추진단과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기존 대학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



산하에는 대학제도과, 대학경영지원과, 연구기관지원과, 학연협력 지원과가 있다. 2차관은 대학 관련 업무 숙지와 현안 해결에만 매달려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과학계에서 말하고 있다. 옛 과기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었던 박종용 실장이 1차관 밑의 인재정책실로, 홍남표 국장이 인재정책분석관으로 옮겨 1, 2차관 아래 옛 교육부와 과기부 관리들이 뒤섞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도를 그리는 데 참여한 옛 교육부 소속 관리리는 “정말 주기 싫은 것을 넘겨줬다”며 “화학적 결합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렇게 조직을 그렸다”라고 ‘음모론’에 항변했다. 이 조직도에서 과학기술부 출신 국장급 중 7명, 과장급 중 6명이 보직을 맡지 못하고 공중에 떴다. 현재 이들은 산하 기관에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재기를 노리고 있다.

어떻든 제2차관은 과학기술을 주로 맡고 있다. 그 산하에는 2실 2국 6관 3단 40개 과(팀)이 있다. 2실은 과학기술정책실과 학술연구정책실, 2국은 국제협력국과 원자력국이, 6관은 과학기술정책기획관, 정책조정기획관, 거대과학지원관, 기초연구정책관, 학술연구지원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이, 3단은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대학자율화추진단이 있다. 과학기술 관련 각 실·국·관·단·과별 업무 분장은 별도 표로 정리해 소개하겠다.

울 9월 법 개정해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통합

과학기술부 산하 이공계 연구소 26개 중 13개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7개 연구소는 그대로 교육과학기술부로 옮겼다.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10개 연구소 중 6개는 교육과기부로, 4개는 지식경제부로 나눠 옮겼다.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9개 연구소는 통째로 지식경제부로 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엔지니어링기술지원, 신기술인증지원, 전략기술 수출 승인 업무도 지식경제부로 소관 부처가 바뀌었다.

이처럼 산하 기관과 기능이 나눠지면서 옛 과기부의 예산 2조6천299억 원 중 80%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머지 20%는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다. 과기부 인력 437명 중 90%인 397명이 역시 교육과학기술부로 옷을 바꿔 입었다.

또 하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있다. 한국의 양대 정부 연구비 지원 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올 9월 법 개정을 거쳐 통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두 기관을 통합해 국가학술연구재단(가칭)으로 하고, 그 중 장학기능을 떼어내 국가장학재단(가칭)으로 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방안을 공문에 부쳐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쯤 두 기관이 완전 통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두 기관을 통합해 미국 과학재단(NSF)처럼 만든다고 했으나 실상 NSF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관련 주요 업무분장

실	과	주요 업무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 ◇국가석좌 교수 및 국가석좌연구원 제도 운영 ◇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 추진 ◇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여성 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 지원 ◇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연재교육지원과	◇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등의 육성 지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제 개최 지원 ◇ 과학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정책과	◇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의 설정 ◇ 국가적 당면 현안에 대응한 신규 과학기술 정책의제의 발굴 및 정책 추진 방안 제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 지원
	과학기술전략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발전 ◇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총괄·조정
	과학기술문화과	◇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과학기술문화전문기관의 육성 지원 ◇ 과학기술전문방송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립중앙과학관의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 과학기술유공자 포상제도의 운영, 발전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과	◇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 기술 예측·분석·기술분야별 수준 및 기술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책조정지원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간의 연계, 조정지원 ◇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시책의 추진
	투자분석기획과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 수립 지원
	연구성과관리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정책자문지원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
	우주정책과	◇ 국가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추진 ◇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관리
	우주개발과	◇ 인공위성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운영 ◇ 우주센터의 개발·관리·운영
	거대과학협력과	◇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기본 계획 및 정책의 수립·추진 ◇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추진 ◇ 포항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 공동연구장비의 확충 및 공동 이용 촉진
	핵융합연구과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학술연구정책실	연구정책과	◇ 학술 및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한국과학재단의 육성·지원
	기초연구지원과	◇ 이공학 분야 연구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이공학 분야 학회 및 학술단체의 육성·지원
	미래원천기술과	◇ 미래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에너지·환경 등 공공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지원
	융합기술팀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방침 및 추진전략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인지과학과 관련된 제도 및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분석 ◇ 노연구와 관련된 법령·제도·인프라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 사업 지원
	학술연구진흥과	◇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한국학술진흥재단 육성·지원 ◇ 기업부설 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육성
	대학연구지원과	◇ 대학교수 학술교류 및 글로벌연구네트워크 구축 종합계획 수립·시행 ◇ 대학 중점연구소 선정·평가 및 지원 ◇ 지방대학특화사업의 추진 ◇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지원 ◇ 두뇌한국 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학술연구유리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유리·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수립·추진 및 제도 운영 ◇ 외국박사학위 신고관련 정책 수립·추진
	연구환경안전과	◇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연구기관지원과	◇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 ◇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육성의 육성·지원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지원
	학연협력지원과	◇ 한국과학기술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광주과학기술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에는 인문학 지원 기능이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과제 심사 업무와 지원을 하는 것은 미국과학재단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에서는 국가장학사업은 새로 생길 국가학술연구재단에서 하나의 지원 조직만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것을 기관을 하나 또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전형적인 조직 또는 기관 만들기 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에 대해 박종용 인재정책실장은 미국도 전담 조직과 수천 명이 국가 장학 사업을 맡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글쓴이는 경희대학교 전자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